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3.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9. 25. 정윤주 의원 외 16인 (의안번호 523호)
- 나. 회부일자: 2025. 10. 1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10. 20.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윤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성북구 내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신체·정신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주구역 지정 및 해당 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금주구역 지정·변경 등의 규정(안 제3조~안 제5조)
- 교육 및 홍보, 연구 단체 지원 등의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규정(안 제11조)
- 과태료 규정(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의4, 제34조
-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협의사항 : 건강정책과
- 입법예고 : 2025. 9. 30. ~ 2025. 10.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2020.12.29.)을 반영하여,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방법 등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12.29.)

- 현행 조례에서는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였으나,

※ 25. 10. 현재 조례상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없음

-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 음주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정비

조례의 목적을 국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 주민-----.

○ 안 제2조(정의) 제3호 정비, 제4호 신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정비하고, ‘금주’ 및 ‘금주구역’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 안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목 및 내용 정비

- 제3조 제목을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서 ‘금주구역의 지정’으로 변경함.

이는 2020.12.29.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제1항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1)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음주로 인한 유해요인을 예방하려는 것임.

-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도록 하되 지역축제나 행사 등에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규정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 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 ----- 법 제8조의4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각 호의 어느 하나----- 금주구역-----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설>	4. 버스 정류소·택시 승차대
3. 버스 정류소·택시 정류장 (신설 2015.11.5, 개정 2021.3.18.)	<삭제>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 설치 또는 부착-----.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 금주구역----- ----- -----.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에 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신 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안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신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여 금주구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신설함.

○ 안 제11조(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신설

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에 연계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2조(과태료) 신설

법 제34조제3항제1호²⁾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구청장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여 금주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음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2020.12.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 현행 조례에서 운영 중이던 ‘음주청정지역’ 제도를 법률 용어인 ‘금주구역’으로 정비함으로써 용어 체계를 일원화하고, 금주구역에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추가 하며, 금주구역 지정 절차,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과태료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문장을 명확하게 조정하는 등 금주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금주구역 지정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내 일정한 장소에 서의 음주 행위를 제한하여 공공질서 유지, 어린이·청소년 보호, 주민 안전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공공장소 음주 폐해와 음주 조장 환경, 주민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내·홍보 및 필요시 예외 허용을 병행하여 금주구역이 원활히 지정·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3.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9. 25. 양순임 의원 외 20인 (의안번호 522호)
- 나. 회부일자: 2025. 10. 1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10. 20.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성북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
- 사전협의 : 건강관리과
- 입법예고 : 2025. 9. 30. ~ 2025. 10.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현재 성북구민 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구민으로 확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포성 발진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방치 시 근육마비, 실명,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면역력이 저하된 6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1회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가예방접종 대상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백신 종류에 따라 시중가가 15만원 ~ 60만원 수준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큰 실정임
 - ※ 백신 종류별 시중가 : 생백신(1회 접종) 약 15만원 / 사백신(2회 접종) 총 50만원~60만원
- 또한, 2023. 4.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한 대상포진 진료 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상포진 환자중 60세 이상이 42.4%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대별 진료비는 60세 이상에서 24만원~38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2021년 총 진료비는 1,661억원으로 2017년(1,484억원)대비 11.9% 증가(177억원)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고령화에 따른 대상포진 관련 진료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3. 4. 21),

< 2021년 '대상포진' 질환 연령대별 >

(단위: 명, %)

전체	9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이상
722,257	3,012	14,184	43,185	79,739	114,682	161,518	172,144	90,764	43,029
(100)	(0.4)	(2.0)	(6.0)	(11.0)	(15.9)	(22.4)	(23.8)	(12.6)	(6.0)

< 2021년 '대상포진' 질환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 >

(단위: 천원)

전체	9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이상
230	119	189	183	185	191	213	245	282	381

< 2017년~2021년 '대상포진' 질환 총 진료비 >

(단위: 백만 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17년대비)	연평균 증감률
148,406	158,811	165,894	164,759	166,131	11.9%	2.9%

- 참고로, 2025년 10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대상포진 지원 대상자 기준을 보면, 16개 자치구는 취약계층만 지원, 65세 이상 전체 지원은 6개구(용산·성동·도봉·노원·강남·송파), 70세 이상 전체 지원은 1개구(동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지원대상), 대상자 확대

- 제1항제2호의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에서 65세이상 모든 성북구민으로 확대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① ----- ----- -----
1. 인플루엔자 (생략)	1. (현행과 같음)

<p>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u>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u></p> <p>나. (생략)</p> <p>3. 백일해 (생략)</p>	<p>2. ----- ----- -----</p> <p><u>가. 65세 이상의 구민</u></p> <p>나.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	---

- 이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접종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구민에게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게 됨.
- 집행부 예산추계 자료에 따르면 사업 초기와 중장기 소요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초기인 2026년에는 약 25억 3,500만원으로 소요 비용이 가장 크나, 예방접종이 1회에 한하여 지원되기에 대상자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7년에는 약 4억 5,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약 2억 3,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비용추계 (집행부 제출 자료), 1인 대상포진 백신비는 78,000원으로 산출

- 2026년 32,503명(65세 이상 인구 81,259명의 40%), 25억 3,500만원
- 2027년 5,883명(미접종자 일부 + 65세도래자 40%), 4억 5,800만원
- 2028년 이후 약 3,000명(미접종자 일부+65세도래자 40%), 약 2억 3,000만원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65세이상)에게만 지원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65세 이상 모든 성북구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령층 전체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그간 '대상포진' 사업 추진 현황 >

- ▶ 사업대상 : 접종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구민으로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사업기간 : 2024. 1.~ 계속
- ▶ 접종주기 : 1회 접종(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 ▶ 접종백신 : 스카이조스터(생백신)
- ▶ 접종비용 : 무료(백신비 78,000원)

구분	예산액	65세이상	사업대상 (기초수급자)	목표인원	접종자수(접종률)	비고
2024년	387,057천원	80,562명	7,928명	3,700명	3,043명(38%)	
2025.9월현재	68,777천원	83,682명	8,503명	650명	537명(83%)	미접종자+65세도래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4)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및 고령층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이에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고 치료비 부담이 큰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치료비 부담과 합병증 위험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현재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임의접종으로 전액 구비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함. 따라서 사업대상자 범위, 백신 수급 및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향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의 편입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서울시 자치구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현황(2025. 10 현재)

○ 취약계층 선별 지원 : 16개구

○ 전체 지원 : 65세 이상 6개구, 70세 이상 1개구

번호	보건소명	접종 대상자	예산액 (천원)	
			2024년	2025년
1	종로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14,750	8,000
2	중구	★★	★★	★★
3	용산구	65세 이상	596,369	870,400
4	성동구	65세 이상	1,111,200	540,000
5	광진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73,400	32,850
6	동대문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7,000	34,000
7	종랑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40,000	100,000
8	성북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87,000	68,777
9	강북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40,000	382,478
10	도봉구	65세 이상	334,556	1,736,780
11	노원구	65세 이상	1,768,490	10,030
12	은평구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04,610	129,493
13	서대문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6,490	36,490
14	마포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91,830	55,000
15	양천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78,440	49,134
16	강서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5년 시행	612,000
17	구로구	★★	★★	★★
18	금천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27,000	27,000
19	영등포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25년 시행	120,000
20	동작구	70세 이상 60~69세 기초생활수급자	1,181,866	758,175
21	관악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5년 시행	322,400
22	서초구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87,668	87,668

23	강남구	65세 이상('25.9.26.개정)		96,000	96,000
24	송파구	65세 이상('25.10.10.개정)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400,000	
25	강동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000	287,007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3.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0. 1.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13호)
- 나. 회부일자: 2025. 10. 1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10. 20.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황원숙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에 의해 선정
- 위탁사무내용
 -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 등록 통계 사업의 지원
-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 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의 운영
-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기존 위탁현황

기관명	소재지	규모	위탁기간(최초 위탁일)
건국대학교 병원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63, 성북구보건소 5층 (본소)	549.9m ²	2023. 1. 1.~2025. 12. 31. (2007. 7. 1.)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568, 장위석관보건지소 3층 (분소)	182.8m ²	

다. 관련근거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를 재위탁(공개모집)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⁵⁾에 따라 성북구의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종사 자수	(기존)위탁법인 협약기간	‘25년 사업비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63, 성북구보건소 5층 (본소)	549.9㎡	23명	건국대학교병원 2023. 1. 1~2025.12.31. (3년)	1,865,006천원 (국38:시30:구32)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568, 장위석관보건지소 3층 (분소)	182.8㎡	1명		

나. 주요내용

-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이 2025.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체결일로부터 3년간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임.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제1항6)에 따라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자 관할 보건소 내에 설치한 시설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7)에

6) 「치매관리법」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④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30)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15. 09. 30)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09. 30, 2020.12.31.)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따르면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치매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으로의 위탁 운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로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